

“일미동맹”과 “위안부문제”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우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2년 9월 20일

민주당 대표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시작되었다. 민주당 쪽은 노다(野田) 씨의 재선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관심은 자민당 총재 선거 쪽으로 기운 듯하다. 작년에 간 나오토(菅直人) 씨의 사임으로 노다 씨가 민주당 대표로 뽑혀 수상이 되었을 때는, 1년 뒤 대표 선거까지의 “구원투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재선이 유력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어지간히 인재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자민당도 입후보한 5명의 면면을 보면, 역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느낌이다.

어찌되었든 2009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당초 “긴밀하고 대등한 일미관계”를 내걸었고, “주둔군 지위협정의 개정”과 “주일미군기지의 재검토” 등도 언급하였으며, 민주당 정권의 첫 번째 하토야마(鳩山) 수상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게는 이를 실제로 구현할 실행력이 없었고, 결국 그러한 “미국과의 거리두기” 정책과 구상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미국에 의해 공격을 당해 파기되었고, 노다 내각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의 자민당 정권 이상으로 노골적인 대미종속노선으로 돌진하고 있다. 이렇게 “일미동맹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일미동맹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발상이 된 듯이 보인다. 자민당은 이전부터 “일미동맹, 일미동맹”이라고 말해 온 당이므로, 이제 일본 정치는 “일미동맹” 일변도, “일미동맹”이라는 “주장”을 외칠 능력밖에 없는 정치가들만 남아버렸다. “동맹”이라고는 하나 그 실태는 “종속”밖에 없기 때문에, “일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미국이 말하는 바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만

“일미동맹”이라는 말을 지금은 정치가나 매스컴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쓰고 있지만, 실은 30년 전쯤에는 공공연히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1981년,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의 일미공동선언에서 처음으로 일미“동맹”이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스즈키 젠코 수상은 “동맹에는 군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명하였으며, 이에 “동맹이 된 이상 군사를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이토 마사요시(伊東正義) 외무대신이 결국 사임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까지 있었다. “동맹”이라는 말 한 마디에 그렇게까지 사건이 된 까닭은 헌법9조가 그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울추”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일미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쓰인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9조의 “공동화(空洞化)”가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지금 이렇듯 민주당 대표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도 예외 없이 “일미동맹이 기축”이라느니 “일미동맹의 강화”를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전쟁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지겹게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8월말에 노다 수상이 “중군위안부”에 대해서 “군이나 관헌이 강제연행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다”고 발언하였고, 이어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수상도 “증거가 없는데도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담화(河野談話)』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덧붙여, 하시모토 토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도 8월 하순에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는데, 오사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견할 입장이 아닐 터인데, 기자의 물음에 경망스럽게 대답하는 쪽도 이상하지만, 이런 것을 오사카 시장에게 일부러 물어보는 기자는 멍청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것도 “일미동맹”이라는 말과 같이, 9조 “공동화”의 진행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발언과 “일미동맹이 기축”이라느니 “일미동맹 강화”라는 말이 서로 저촉(抵触)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2007년에 미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일본의 정치가, 학자, 저널리스트 등 44명이 『워싱턴포스트』 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의견광고를 냈다. 그것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문서가 역사가 또는 연구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 “위안부는 당시 세계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공창제도 아래에서 일했다”, “많은 위안부는 장교보다 높은 소득을 올렸다”는 등의 “사실(事實)”을 들어, “일본군이 젊은 여성들에게 성적 노예가 될 것을 강제하는 죄를 범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크게, 그것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원 결의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결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늘어났고, 7월30일 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적 감각으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강제성의 유무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더구나 “당시에는 일반적이었다”며 정당화하는 듯한 변명이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국민통합의 상징”의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 국가, 사회인가는 제쳐두고,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민주주의”라는 감각은 이른바 DNA와 같이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병사의 성욕 처리의 도구로 취급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하려는 언동에 대해서는 이른바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나타내는 까닭인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공유해야 하는 “인권”문제로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일파”라고 알려진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도 말한 바 있다.

2006년의 부시-고이즈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21세기의 새로운 일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공동문서는 “보편적 가치관과 공통의 이익에 바탕을 둔 일미동맹”을 내걸었다.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공통의 이익”에 바탕을 둔 일미동맹이다. 그러나 위 공동문서에는 “공통의 이익”뿐만 아니라, 또 하나 “보편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일미동맹이라는 것도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는 “자유, 인간의 존엄 및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책임을 회피하는 듯 말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이며, “일미동맹”의 “핵” 가운데 한 가지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 또 일본에서는 영토문제도 얽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언설이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이 사회의 “본능적 혐오감”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해 올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렇게 된 뒤에 “미안했습니다”며 사죄하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아니면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아베 씨 등은 여차하면 “일미동맹”의 파기도 무릅쓴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셈인데, 그러한 것일까.